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한국의 대응방안

2022. 11. 23

고 희 채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 Contents

I 글로벌 통상 환경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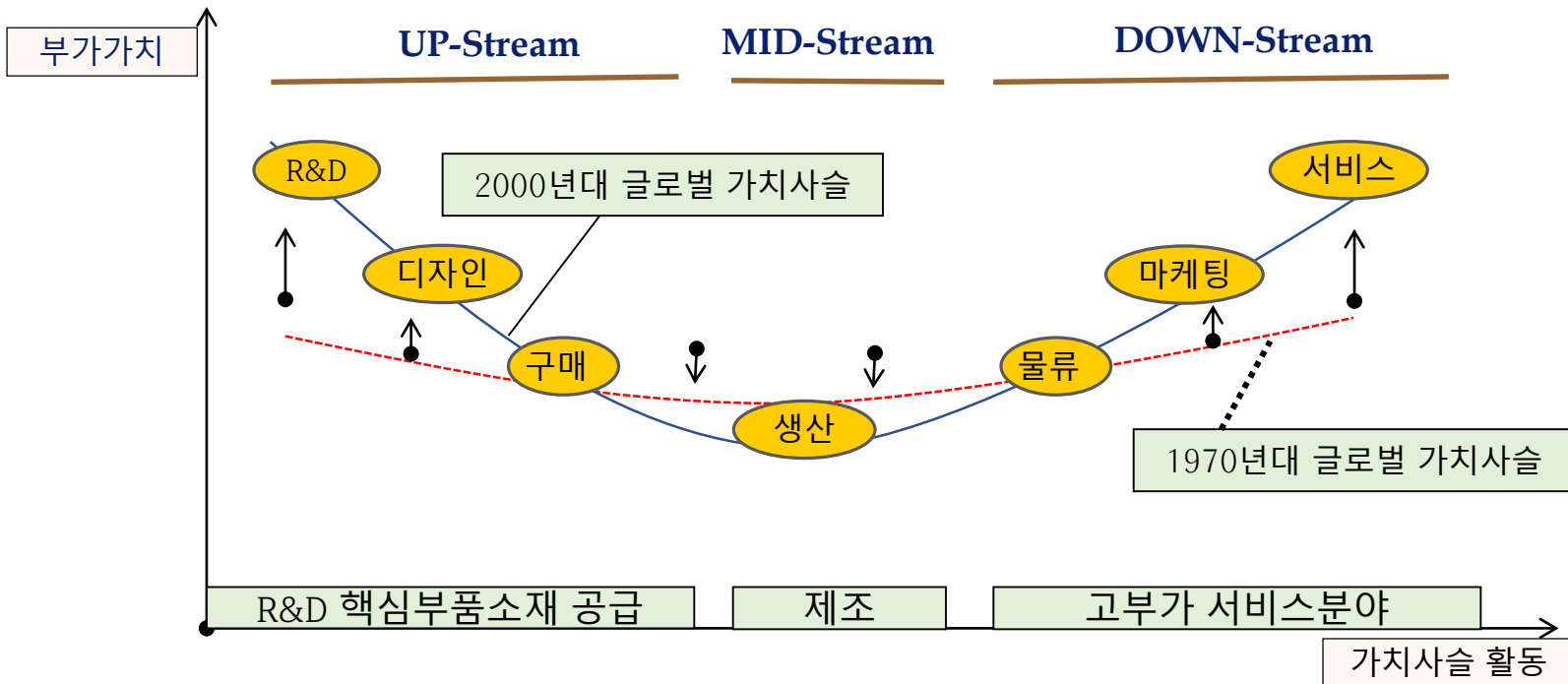
II Mega FTA 주요 내용

III 대응방안

글로벌 가치사슬(GVC)이란?

❖ 국제무역 및 투자에서 업스트림, 다운스트림에서 부가가치가 생성되는 과정

글로벌 가치사슬과 부가가치



현지화(Localization)란?

➤ (개념) 해외로 진출한 기업이 독립된 경영주체로 현지사회에 정착하는 것을 지칭

1 주요 선진국의 리쇼어링 정책 ➡ 자국 일자리창출 ➡ 기업의 '현지화 전략'이 부각

- 본사의 경영방침과 시스템을 기본으로, 마케팅, 생산, 회계 등 기업활동 전분야에서 현지사회에 적합한 독자적인 경영시스템을 구축하고 현지사회에 융합함으로써 현지에서 성공적인 사업활동을 추구
- 현지화는 경영환경 변화에 대한 적응력, 생산기지에서 내수시장 진출로 확대, 투자 진출국 요구수준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기업의 전략

2 4차산업혁명과 현지화의 변화

- 4차 산업혁명이라는 큰 흐름속에서 기업들의 기존 현지화전략도 새로운 도전
-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저성장 기조 탈피를 위해 4차 산업혁명 및 산업경쟁력 강화에 대한 새로운 현지화 전략이 필요

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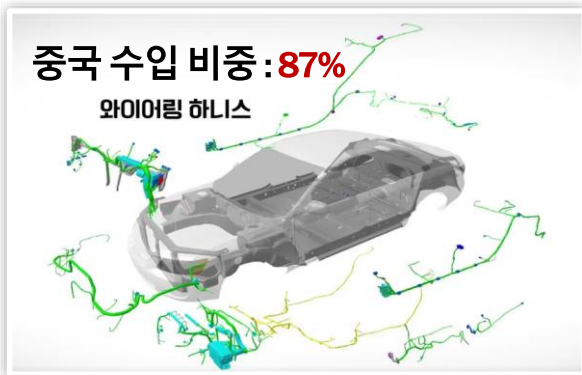
글로벌 통상환경 동향

1. GVC의 지역화(Regional Value Chain)
2. 보호무역의 진영화
3. 저탄소 경제로 성장 패러다임 전환
4. 글로벌 통상환경 재편 동향

1. GVC의 지역화

▶ 코로나19가 가져온 GVC 붕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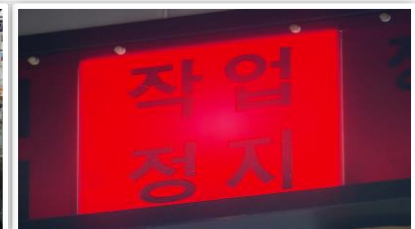
- '20.2월초 국내 완성차 공장 일시 조업 중단 사태 발생



<와이어링 하니스(Wiring harness) 공급 중단 사례>



- 유럽·북미 등에서도 동일 사례 발생
- 공급망이 정치적 이유로 교란된 사례 등장




GVC의 비용 효율성 → 안정성, 회복력 중요성 인식 (China Decoupling 초래)

1. GVC의 지역화

▶ 기존 GVC(Global Value Chain) → RVC(Regional VC), DVC(Domestic VC)로 변화

- ▶ 기존 GVC는 제품의 설계, 부품과 원자재의 조달, 생산, 유통, 판매에 이르기까지 과정이 다수의 지역에 걸쳐 형성된 글로벌 분업 체계 → 리쇼어링, 니어쇼어링, 다변화로 변화

리쇼어링 (Reshoring)	니어쇼어링 (Near-shoring)	다변화 (Diversification)
<p>외국에 있는 생산기지를 자국으로 이전</p>  <p>“미국의 리쇼어링 전략 사례”</p> <p>intel 자국 내 반도체 공장 신설 및 전문인력 고용 확대</p> <p>Whirlpool 미국 세탁기 관세인상으로 해외공장 미국 이전</p> <p>▶ 4차산업혁명에 따른 제조혁신·노동·자본 중심 → 디지털기반 제조업(스마트팩토리)</p>	<p>외국에 있는 생산기지를 자국과 가까운 나라로 이전</p>  <p>“USMCA에 따른 밸류체인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USMCA에 대비, 자동차 및 Tier 1 부품 업체는 '18년부터 수입 축소 대신 로컬 소싱으로 공급선 다각화	<p>공급망을 여러 국가로 분산</p>  <p>“China+1 전략 사례”</p> <p>Apple 아이폰 등 주력제품 조립라인을 베트남, 인도로 이전 검토 중</p> <p>HYUNDAI 中 의존도 높은 부품 공급망을 베트남, 캄보디아로 다각화</p>

1. GVC의 지역화

▶ 각국의 GVC 재편 대응을 위한 지원 정책

중 국



“무역보호주의가 우리를 ‘자력갱생’의 길로 몰아가고 있다. **중국은 결국 자립해야 한다**”
- 시진핑 中 주석

- 紅色 공급망 구축 → 외부 충격에 대한 내성과 경쟁력 확보
→ **세계 절반을 주도하는 구도 확립**
- * 핵심부품 및 미래산업 육성 전략: 2천억 위안 반도체 산업 펀드 3월 출범

미 국



“코로나19 사태로 마스크, 산소호흡기 등 **필수 물자의 안정적인 확보라는 공급망 안전성의 중요성을 일깨워줬다**”
- 바이든 美 대통령

- 행정명령에 따라 4대 주요 품목(반도체, 배터리, 희토류, 의료 물자) 및 6대 산업에 대한 공급망 점검 → 미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을 위한 로드맵을 추진

일 본



“30년 수소상용화와 수소 공급원 다각을 위해 ‘**국제수소 GVC 프로젝트**’를 전개한다”
- 스가 (前)日 총리

- 코로나 19를 계기로 일본기업 중 84%가 GVC 재구축에 착수 (일본경제신문, '21.4)
- * 특정국에 대한 의존도 재검토/분산화, 조달처 변경시스템 구축, 현지조달 확대 등 GVC 체계 강화

E U



“반도체, 배터리 중심의 **EU역내 중심의 공급망**은 물론 **차기 유망분야(그린 수소, 클라우드)**도 공급망을 구축한다”
-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

- (그린 수소) 22개회원국+노르웨이 주도로 EU공통관심 주요프로젝트(IPCEI) 추진 서명('20.12)
- (클라우드) 100억 유로 산업 데이터-클라우드연합 출범

2. 보호무역의 진영화

➤ 상계관세, 수입 제한 조치, 반덤핑 등으로 **보호무역주의 강화 움직임**

→ 미 국



- 중국을 타깃으로 한 **‘환율 상계관세’ 도입** (‘20.4월)
- 수입산 변압기 부분품(5.4), 이동식 크레인(5.6) 대상 **232조 조사 개시**
 - **피터슨 연구소(PIIE)**,
“코로나 사태 후 정부로부터 받은 구제금융(bailout)을 수출 보조금 성격으로 해석하여,
‘상계관세’가 부상할 가능성”

→ E U



- 철강업계, EU집행위 대상 **고강도 수입제한 요구** /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 시행** (7.1)
- 유럽제조자연합, EU 집행위에 코로나 위기 관련 **무역구제 수단 적극 활용 주문**

→ 인 도



- 제조기업의 반덤핑 제소를 돕기 위한 온라인 접수 시스템 도입
- 코로나 19로 타격 받은 자국 석유화학산업 보호를 위해 **코로나 관세 부과 고려**

2. 보호무역의 진영화

▶ 외국인 투자제한 조치 도입 확산 : **산업을 안보차원에서 접근**(예 : 의료·방호용품)

▶ 목적 : 코로나19로 자금난을 겪는 핵심기업들이 저가에 외국에 매수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차이나머니를 타깃으로 한 빗장 강화**

국가별 외국인 투자제한 조치 사례



미국

•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를 통해 중국의 對美투자 유입 견제

“트럼프의 美대선 승패와 관계없이, 중국과의 관세율을 당장 복원할 가능성은 낮으며, 강경 기조는 계속될 전망”[출처: 신한금융투자]



독일

• 인공지능(AI), 로봇, 반도체, 생명공학 등 첨단 기술 분야에 외국인 10% 이상 투자 시, 투자 관련 사항 공개 후 정부 심사



이탈리아

• 국방 및 전략산업 해외 거래 제한 (골든파워법안 발표)



인도

• 인도 국경국이 인도 기업에 투자 시 인도정부 승인 필요



호주

• ‘외국인 투자 검토 위원회’의 사전 승인 필요

2. 보호무역의 진영화

▶ 미중 기술패권갈등 ➡ 신뢰가치사슬(TVC: Trusted Value Chain) 구축

- ▶ 상호의존성 고도화로 DVC 구축 한계: 미국은 동맹과의 협력을 강화해 중국을 배제하는 새로운 공급망(TVC)을 구축하려 하고, 중국은 '취약한 고리'에 핀포인트 식 제재로 대응

미국의 정책	중국의 대응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국 vs. 중국 갈등 ➡ '미국 진영 vs. 중국'으로 보호무역주의가 진영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글로벌 성장 공간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點(미국) ➡ 線(일본, 한국, EU 등) 面으로 확대 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가입,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추진 등 글로벌 영향력 지속 확대, 중국형 글로벌 산업 표준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點(미국)은 미국과 동맹국과의 양국 간 공급망 협력을 의미 (예: 미국과 일본과의 반도체 등 민간 품목 공급망 강화, AI 생명공학 분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협력 합의('21.4), 한국과는 5G, 6G 개발을 위한 Open-RAN 및 첨단 반도체 기술과 배터리, 반도체, 의약품 등에 관한 공급망 합의('2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국 진영 구심 국가중 (1)대중의존도가 높은 국가의 (2) 중국 VC와 경쟁하거나 연관성 적은 분야 우선 제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面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다자간 협력 플랫폼을 의미 (예: IPEF, TTC, Chip4 등)	

3. 저탄소 경제로의 성장 패러다임 전환

▶ 코로나 팬데믹을 계기로 각국은 기후변화 대응을 경기부양과 경제혁신 전략과 연계

▶ <‘지구온난화 1.5°C 특별 보고서’(‘18.10)>

- 2100년까지 지구 평균온도 상승폭 1.5°C 제한 위해 '30년까지 탄소 배출량 45% 감축('10년 대비), 2050년 탄소중립 필요

주요국의 대응 정책

국가	탄소중립	주요정책
미국	2050	· 파리기후협약 복귀('21.1), 2050 탄소중립 행정명령('21.12) · Inflation Reduction Act : 기후변화 대응에 3,690억불 투자
EU	2050	· 그린딜 채택('19.12) : 탄소중립 경제 실현을 위한 청사진 · Fit for 55('21.7) : 탄소배출 55% 감축 위한 입법 패키지
중국	2060	· '30년 탄소피크 : 재생에너지, 친환경차 비중 25% 목표 · 전국 단위 탄소배출권 거래소 개설('21.7, 상하이)
일본	2050	· 그린 성장전략('20.12) : 풍력, 수소 등 14개 분야 육성 · 상장기업의 기후변화대응 관련 정보 공개의무화 검토

* 전세계 198개국 중 136개국이 탄소중립 선언('22.1월 기준, 자료원: Net Zero Track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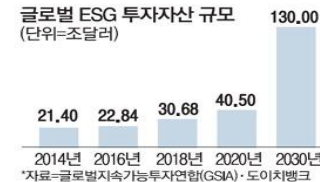
3. 저탄소 경제로의 성장 패러다임 전환

▶ 저탄소 경제 이행을 위한 기업들의 적극적 참여

기업대응



“앞으로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투자결정 기준으로 삼겠다.”
(Larry Fink, BlackRock CEO)



RE 100



<주의>

-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50년까지 재생에너지로 조달'
* 애플, 구글 등 378개 기업이 RE100 캠페인에 참여('22.8월 기준)
- ESG, RE100 등에 대응 못하면 기업피해 발생 가능성
* Apple: 공급망 사용 전력의 100%를 '23년까지 재생에너지로 전환
* SK이노베이션: 고객사들이 과정 하나까지 ESG 기준 준수를 요구.
무엇을 얼마나 공급받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공급받느냐가 기업의 화두

탄소 중립의 역설 : 그린플레이션(Green + Inflation)

- 주요국의 탄소경제 드라이브로 청정에너지 생산에 필요한 광물자원(구리·리튬 등) 수요 급증
- 급격한 탄소제로 시스템 전환으로 전력 부족 현상 발생
→ 석탄 등 화석연료 가격 급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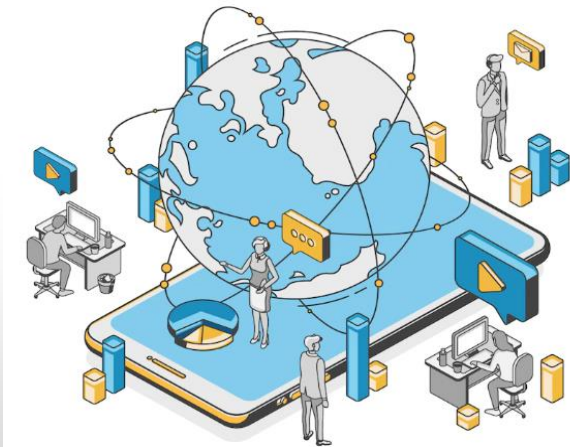
탈탄소·친환경 가속화에 급등하는 원자재값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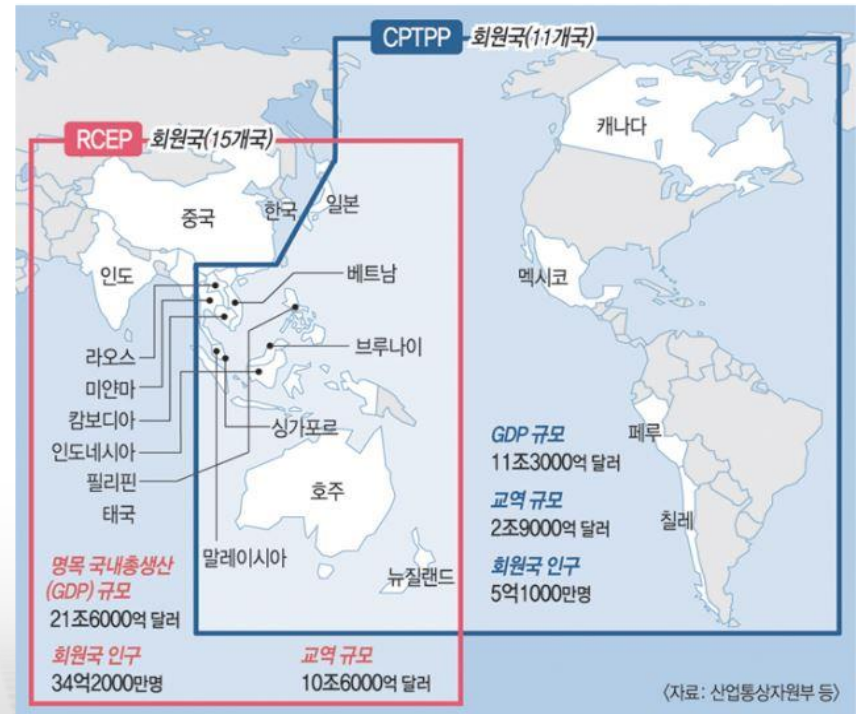
자료: 한국자원정보서비스·한국석유공사 등

4. 글로벌 통상질서 재편 동향

- 양자 FTA 넘어 다자간 FTA 체결 확대
 - * WTO 기능 약화 → 다자간 FTA를 기반으로 무역규범 정립
 - * 양자 FTA 단점 스파게티볼 효과 대응
- RCEP, CPTPP 등 메가 FTA 발효, IPEF의 대두
- RCEP 발효로 인한 우리기업 기대 효과
 - 역내 통일 원산지 규정 도입 및 누적원산지 규정으로 역내 공급망 효율화 촉진 전망
 - 지식재산권 보호기반 마련 (상표권, 특허, 콘텐츠)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II

주요 Mega FTA 동향

1.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2.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3.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1.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개요

▶ 세계 최대 규모의 다자간 자유무역 협정

- 아세안 10개국, 한·중·일·호주·뉴질랜드 등 총 15개국 참여

* RCEP 對세계 비중('20 IMF) : △GDP 26.1조달러(31%), △인구 22.7억명(30%), △무역규모 5.6조달러(32%)

경과

▶ '12.11월 협상 개시 이후, 총 31차례 공식협상을 거쳐 8년만에 타결

▶ '19.11월 협정문 타결, '20.11월 최종 서명

▶ 협정상 요건*을 만족한 10개국**은 22.1.1일 발효

* 과반 (非아세안 5개국 중 3개국/ 아세안 10개국 중 6개국)이 비준서 기탁 완료 → 기탁 후 60일

** (非아세안)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아세안) 싱가포르, 브루나이, 캄보디아, 라오스, 태국, 베트남

- **우리나라**는 비준서 기탁('21.12.3일)한 60일 이후인 '**22.2.1일부터 적용**

1.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의의

- ▶ 세계 최대 FTA를 통한 역내 자유화 제고 및 경제회복 도모
 - 전세계의 자유주의 확산 도모
 - 기존 FTA대비 추가개방된 역내국가로 교역 확대
- ▶ 아세안과의 협력강화 등 신남방정책 가속화
 - 對아세안 상품 시장 추가개방, 게임·영화 등 서비스 시장개방으로 우리 기업의 진출 및 상호 교류·협력 증진 기대

* 지난 30년간 한-아세안 교역 30배, 투자 40배, 상호방문객수 40배 증가



1.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가. 상품

- ▶ 既체결 FTA(한-아세안 등) 업그레이드, 일본과 신규 FTA 효과
- ▶ 우리 공산품(對日), 농수산물(對아세안, 中 등)의 민감성 보호



對 일본

◆ 자동차, 기계 등 민감 품목은 모두 양허제외, 개방 품목도 장기(10~20년) 및 비선형철폐 다수 활용해 보호

- 양국의 상호 민감성과 상이한 무역 구조를 감안하여 RCEP 내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양허



對 아세안

◆ RCEP에서 既체결 FTA 대비 상당 수준의 추가개방을 확보 → 전반적 자유화 수준을 90% 이상으로 제고

- 아세안은 우리 핵심품목(자동차·부품, 철강 등)뿐만 아니라 섬유, 기계부품 등 중소기업 품목도 추가 시장개방



농·수·임산물 분야

◆ 주요 민감품목은 양허제외로 보호, 일부 개방 품목도 관세를 일부만 감축하거나 관세철폐 기간을 충분히 확보

- * (양허제외) 쌀, 고추, 양파, 사과, (관세감축) 녹용, 타피오카(냉동), 합판 등

1.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나. 서비스

- ▶ 한-아세안 FTA('07년) 대비 아세안 국가의 문화 콘텐츠·유통·물류서비스 등 시장개방 상당부분 확대
- ▶ △서비스 무역 촉진을 위해 추가 자유화 요소* 도입, △ 이행요건 부과 금지 등 한-아세안 FTA 대비 높은 수준의 투자자유화**, △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절차는 동 제도 개선에 대한 국제적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감안, 발효 후 2년 내 논의 개시 합의

* 각 국가별로 일부 분야에 대해 최혜국 대우 의무(제3국과의 협정에서 더 나은 대우 부여시 역내국에게도 부여)와 래치(자유화 후퇴 방지) 메커니즘 적용

**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하여 기술이전 강제 또는 로열티 상한 제한 등의 요건 부과 금지

문화 콘텐츠	· (태국) <u>교육용 온라인게임</u> 외자지분제한(49%)하 합작법인 설립 허용
	· (필리핀) <u>애니메이션, 음반녹음, 라디오·TV</u> 등 외자지분제한(49%)하 합작법인 설립 허용
	· (인니) <u>영화 제작·배급·상영, 음반제작, 공연</u> 등 외자지분제한(51%)하 합작법인 설립 허용
유통· 물류	· (태국) <u>자국생산상품 소매, 의약품 등 도매</u> 외자지분제한(49, 70%)하 합작법인 설립 허용
	· (인니) <u>식음료, 의류 분야 도매·프랜차이즈</u> 외자지분제한(51%)하 합작법인 설립 허용

1.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다. 규범

- ▶ 단일 원산지 기준 마련, 증명방법 다원화 등 FTA 활용 편의성을 제고
- ▶ 지재권 보호 강화·전자상거래 챕터 도입 등 규범 선진화 도모

원산지

- 역내(15국) 교역에 적용되는 단일한 원산지 기준의 도입
- Spaghetti Bowl 효과 완화 및 FTA 활용 편의성 제고

* [기존] RCEP 참여국간 FTA별로 상이한 원산지 기준 적용 → [변경] 단일 기준 적용

지재권

- 「저작권 · 상표 · 특허 관련 실체적 권리 · 집행규범 규정
- 한류 콘텐츠가 확산 중인 RCEP 역내에서 지재권 보호

* [기존] 지재권 챕터 없거나(한-아) 상대적으로 수준 低(한-상) → [변경] 온라인 지재권 침해에 대한 민형사 구제, 악의적 상표 선점에 대한 상표등록 취소 등 규정

전자상거래

- 한-아세안 FTA에 없던 전자상거래 챕터를 도입하여 안정적인 전자상거래 환경 조성
- * 아세안 전자상거래 시장 규모 전망 (Google & Temasek) : ('16) 74억불 → ('25) 878억불



2.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가. IPEF 개요 및 경과 (1)

배경 : 팬데믹 이후 급변한 통상환경에 대응하는 역내 경제플랫폼 필요성 대두

- ▶ 팬데믹을 계기로 **공급망 안정화, 기후변화 대응, 디지털 전환** 등이 新 이슈로 부각
- ▶ 글로벌 경제동상 중심축이 기존 “**효율성**(efficiency)”에서 “**회복력**(resiliency)”으로 이동
- ▶ 급변한 통상환경은 기존의 시장개방 중심 무역·통상 협정에도 **방향 전환을 요구**

➡ 인·태 지역이 공통으로 당면한 과제에 대응하기 위한 역내 협력 플랫폼 필요성 대두

의의 : IPEF는 전통적 무역협정과 다른, 새로운 이슈 중심의 新경제협력플랫폼

전통적 무역협정

상품 관세철폐, 서비스 시장 자유화 등 **시장 개방에 초점**

IPEF

시장개방은 다루지 않고, 디지털 등 무역규범, 공급망, 청정에너지, 조세·반부패 등 **포괄적 아젠다에 대한 규범과 협력**을 중점적으로 논의

➡ 신통상질서 주도, 우리 산업 경쟁력 제고 및 해외진출 기회 확대를 위해 초기부터 참여 필요

2.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 가. IPEF 개요 및 경과 (2)

경과 : '22.5월 참여국간 정상급 행사를 통해 IPEF가 공식적으로 출범

- ▶ '21.10월, 美 바이든 대통령은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서 인도-태평양 지역 경제·안보를 아우르는 ‘인태 경제 프레임워크’(IPEF) 구상 발표
- ▶ '22.5월, 약 7개월 만에 IPEF 정상행사를 통해 출범(5.23일) ➡ 협상(negotiation)”을 위한 “협의(discussion)”를 개시하기로 합의

* 출범 배경 :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 회복력과 지속가능성, 포용성에 기반한 경제 회복과 발전을 위해 긴밀한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

(We recognize the COVID-19 pandemic has underscored the imperative of working closely together to ensure that economic recovery and advancement are grounded in resilience, sustainability, and inclusivity.)” (5.23일, IPEF 출범 선언문)

- ▶ 출범 이후, 협상 개시를 위해 참여국간 의제 협의(scoping exercise) 진행 중

* 비공식 장관회의(본부장, 6.11), 한미 수석대표회의(6월), 참여국간 실무협의(5~6월) 등

2.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 나. IPEF 참여국 및 논의내용 (1)

규모 : 14개국이 참여하는 IPEF는 인·태 지역 최대 규모의 경제협력체

▶ IPEF에 참여하는 14개국을 기준으로, **全世界 인구의 32%, GDP의 41%**에 해당

참여국	인구 / GDP	우리와의 교역규모
14개국 (韓, 美, 日, 호주, 뉴질랜드, 인도, 브루나이, 인니, 말련,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피지)	25억명 (전세계의 32.3%) 34.6조 \$ (전세계의 40.9%)	3,891억 \$ (우리 총교역 규모 대비 39.7%)

구성 : 4개 분야(pillar)로 구성

4개 분야

△무역, △공급망, △청정에너지·탈탄소·인프라, △조세·반부패

* 무역 = Pillar 1, 공급망 = Pillar 2, 청정에너지·탈탄소·인프라 = Pillar 3, 조세·반부패 = Pillar 4

- 참여국간 협의를 거쳐 4개 분야별 세부 의제를 구체화해나갈 계획

2.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 나. IPEF 참여국 및 논의내용 (2)

디지털, 공급망, 기후변화 등 포괄적 경제통상 이슈에 대한 규범과 협력을 논의

→ 필러1 : 연결경제 - 무역

- 디지털, 노동, 환경, 농업, 무역원활화, 경쟁, 투명성·모범규제관행 등에 대한 ‘규범’ 및 ‘협력’ 논의

→ 필러2 : 회복력있는경제 - 공급망

- 공급망 위기대응을 위한 협력(역내 공동 위기대응 메커니즘 등) 및 역내 공급망 기반 강화(정보교환, 핵심품목 협력사업 등)등 논의

→ 필러3 : 청정경제 - 청정에너지·탈탄소·인프라

- 청정에너지 전환 기술개발·인프라 구축, 핵심산업 및 도시·농촌지역 탈탄소화, 메탄 배출 감축 및 탄소제거 등 포함

→ 필러4 : 공정경제 - 조세·반부패

- 세제, 자금세탁방지·반부패·뇌물방지, 정부조달 등 관련 참여국 역량강화 지원 등을 통한 장기적 투명성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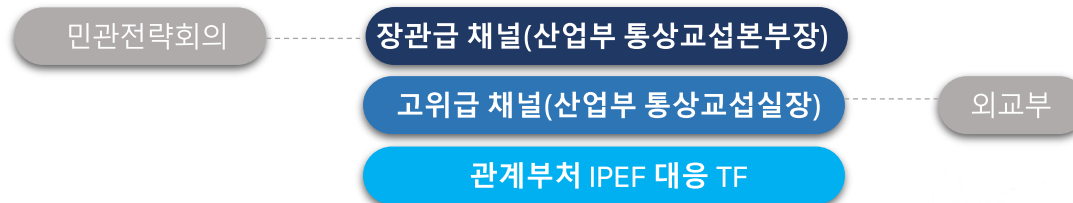
2.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 다. 준비 현황

IPEF 민·관공동 대응체계 구축 및 전문가·이해관계자 등 의견 수렴

- ▶ 협의·협상 개시 등에 대비, 통추위(5.27)·대경장(6.7) 등 논의를 거쳐 범정부 추진체계 구축
 - 관계부처간 협력을 통해 우리 입장을 점검하고 참여국과 IPEF 의제 범위 등 협의
- ▶ 민관전략회의 및 필러별 워킹그룹(WG)을 통해 정부·민간이 one team으로 추진전략 논의

* 통상산업포럼 (5.26일), 민관전략회의(6.23일) 등 개최, 필러별 WG 구성·운영 중



필러	Pillar 1 무역 / 산업부	Pillar 2 공급망 / 산업부·기재부·외교부	Pillar 3 청정에너지·탈탄소·인프라 / 산업부·외교부	Pillar 4 조세·반부패 / 산업부·기재부
WG (일부기관만 예시)	(업계·전문가) 무역협회, 인터넷기업협, 핀테크협, 대외研, 노동研, 농경研, 해수개발원 등 (관계부처) 기재부, 농식품부 등	(업계·전문가) 대한상의, 반도체협, 전지산업협, 글로벌공급망분석센터, 산업研 등 (관계부처) 과기부, 중기부 등	(업계·전문가) 대한상의, 수소융합얼라이언스, 해외건설협 등, 예경研, 환경研, 환경공단 등 (관계부처) 환경부, 국토부 등	(업계·전문가) 무역협회, KOTRA, 조세研, 행정研, 조달研, 부동산研 등 (관계부처) 권익위, 조달청 등

2.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 라. 향후 계획

정부-업계-전문가가 One Team으로, IPEF 논의에 적극 참여

▶ 대내 : 각 필러별로 관계부처,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WG 구성

분야	구성방안
필러 1	디지털, 노동, 환경, 무역원활화, 경쟁, 농업, 투명성·모범규제관행 등 7개 분과 운영
필러 2	단일 분과로 운영 → 의제 구체화에 따라 소분과 구성
필러 3	①청정에너지 전환, ②탈탄소화 및 탄소제거, ③인프라 3개 분과로 운영
필러 4	①조세, ②반부패·뇌물방지, ③정부조달, ④자금세탁방지 4개 분과로 운영

* 의제 구체화시, WG 확대 운영, 이해관계자와 동향 공유 및 추가 의견수렴 등 진행 예정

▶ 대외 : 의제 구체화 등 논의 쏠과정에서 참여국간 협의에 적극 참여하여 우리 관심의제 반영

- 우리업계 실익을 확보할 수 있도록 우리 **관심분야 중심으로 구체적인 규범 및 협력사업 제안**
- 개도국 역량개발 및 기술지원과 함께, 우리 기업들의 진출을 지원할 수 있는 **협력 프로젝트 발굴**

3.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 가. 진행경과

→ 협상 주요 경과

TPP 협상	'05년 발효된 Pacific 4(뉴질랜드, 싱가포르, 칠레, 브루나이)에 '08년 미국이 참여하면서 호주, 베트남, 멕시코, 캐나다, 일본 등 총 12개국 참여 (* '05년 Pacific 4 → '08년 美/호/페 → '10년 베/말 → '12년 멕/캐 → '13년 日) - 총 19차례 공식협상 진행('10.3월 ~ '13.8월)
TPP 타결	'15.10월 타결, '16.2월 서명을 거쳐 각국은 국내비준 추진. 세계 GDP 37.4%를 차지하는 아태지역 경제통합체 출범 가시화
美 탈퇴	트럼프 대통령 당선에 따라 미국은 TPP 공식 탈퇴('17.1.30일). 각국이 추진하던 국내비준은 대부분 무기한 중단
CPTPP* 출범	APEC 정상회담시 TPP 각료회의 개최, 일부항목** 시행 시기 동결, 관세철폐를 유지하는 큰 틀에 합의, CPTPP로 출범('17.11.12일) * CPTPP(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 ** 지재권, 투자, 서비스, 정부조달, 환경 등 미국이 주장했던 조항 유보
CPTPP 발표	'18.3월 정식서명 이후 발효('18.12.30일)

→ 우리나라 추진경과

- ▶ TPP에 대한 공식관심 최초 표명('13.11월, 대외경제장관회의)
- ▶ CPTPP 가입을 위한 공청회 개최('22.3.25일)
- ▶ CPTPP 가입추진 최종 결정('22.4.15일, 대외경제장관회의)

* 향후 일정 : 국회의 CPTPP 가입추진 계획 보고 후 CPTPP 가입 정식 신청(실제 가입이 이루어지기까지 1~2년 이상이 소요될 전망)

3.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 나. CPTPP 주요내용

상품 즉시철폐부터 최장 21년 철폐를 통해 품목수 기준 95~100%의 높은 수준 자유화 달성

- ▶ (국가별) 일본 95%, 베트남 97.9%, 멕시코·칠레·페루·캐나다·말련·호주 99% 이상, 뉴질랜드·브루나이·싱가포르 100%(품목수 기준)
- ▶ (품목별) 공산품은 99.8%, 농산물은 95%, 수산물은 100% 관세 철폐
- ▶ (양허방식) 한 회원국이 10개의 상대 회원국에게 동일한 양허를 주는 공통 양허가 대부분이며, 일부 민감 품목에 대해서만 국별 양허

* 민감성과 특성을 고려하여 회원국마다 상이하게 양허 유형과 기간 설정

원산지 기준 역내에서 발생한 모든 부가가치와 생산공정 누적 인정

서비스·투자 전반적으로 한미 FTA와 유사 수준이며, 일부 분야는 한미 FTA 수준 이상의 개방 효과

* 베트남, 말련 등 일부국에서 한미 FTA 수준을 상회하는 높은 수준의 서비스·투자 규범 수용

정부조달 정부조달협상(GPA) 수준으로 개방

* 캐나다, 일본, 뉴질랜드, 싱가포르를 제외한 7개국은 GPA 미가입국으로 개방 효과

통관 절차 간소화 및 신속성 강화로 역내 기업의 통관 부담 감소

新규범 국영기업, 수산보조금 등 한미 FTA 대비 의무 수준 강화

3.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 다. 의의 및 영향

→ 의의

- ▶ 높은 수준의 시장개방을 추구하는
21세기형 무역협정으로 전자상거래, 노동,
환경, 국영기업 등 새로운 통상이슈* 포괄

* TBT 등 비관세장벽 완화, 자유로운 데이터 이동,
데이터센터 해외 설치 금지 등

→ 영향

- ▶ 우리나라가 CPTPP에 참여할 경우 **멕시코**,
일본에 대한 추가적인 개방 효과가
기대되나, **對日** 시장개방으로 인한
무역적자 확대 및 농수산물 수입 확대에
따른 업계 피해 발생 등도 혼재



3.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 참고) RCEP · CPTPP · IPEF 비교

구분	RCEP	CPTPP	IPEF
정식명칭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PP)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 (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참여국	ASEAN(싱가포르, 베트남, 태국, 브루나이, 캄보디아, 라오스, 필리핀, 미얀마,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발효) (총 15개국)	캐나다, 멕시코, 칠레, 페루, 브루나이,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베트남, 일본, 호주, 뉴질랜드 (총 11개국)	한국, 미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피지 (총 14개국)
발효일	'22.1.1일	'18.12.30일	'22.5.23일 (출범)
인구 (비중)	22.7억 명 (29.7%)	5.1억 명 (6.7%)	25억 명 (32.3%)
GDP (비중)	26.1조 달러 (49.4%)	10.8조 달러 (12.8%)	34.6조 달러 (40.9%)
對한국 교역규모 (비중)	4,839억 달러 (49.4%)	2,364억 달러 (24.1%)	3,890억 달러 (24.1%)

* 자료원 : 통계청, 한국무역협회 ('20년 기준)

III

대응방안

1. In & Outbound & 공급망 분산을 통한 GVC 재편 대응
2. 전략적인 해외투자 진출 지원 확대
3. 포용적 상생협력 전략 강화
4. 4차산업혁명과 현지화 전략

1. “Inbound 정책” 을 통한 GVC 재편 대응

▶ 해외진출 우리기업의 국내 유턴 및 해외 첨단기업 유치

1 해외 진출기업의 유턴 지원

- 유턴 목표 명확화 필요 : 성장 잠재력 확충 vs. 일자리 창출?
- 유턴기업 사례별 구체적인 기업 니즈 맞춤형 지원

유턴 결정 기업의 관심사항



- ✓ 수도권 입지, 설비투자, 고용 보조금 등
- ✓ 기업별 다양한 요청 사항

- 개별기업 니즈에 따른 맞춤형 지원전략
- Smart Factory로 인건비 부담 해소

* LG 필립스 LCD 유치 사례('03) vs. 수도권 입지규제 완화 사례('10)

- 정부·지자체 협력으로 대기업/협력중소기업의 동반 유턴(선단형) 지원

2 해외 첨단·4차 산업 투자유치

- 경제 기여도가 높은 투자 유치에 대한 핀포인트 맞춤형 유치전략(입지, 현금보조 등)

* 싱가포르 등 경쟁국 대비 유연한 투자 인센티브 제공 필요



1. “Outbound 정책” 을 통한 GVC 재편 대응

▶ 전략적 해외투자 추진

1 글로벌 가치사슬에 맞춘 해외투자 필요(Relocation)

- GVC 재편에 따라, 글로벌 기업 및 대형 시장과 근거리 위치로 기회 확보

“제품이 판매될 지역에서 생산하는 것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전략”

-美 자동차전문 컨설팅 회사 AFS 조 맥케이브 대표

- 글로벌 부품소재 기업의 경우, 가치사슬에 맞춘 해외투자 필요 → ^{BUT} 투자 입지 分散 필요

2 납품 기회 확보를 위한 ‘글로벌 파트너링’ 사업 진행

- 글로벌 가치사슬 전략을 수정 중인 기업에게 더 많은 중간재 납품

주요성과

2010년 부터 추진해 온 KOTRA ‘글로벌 파트너링’ 사업을 확대하여
’20년 글로벌 기업(1,664여개)과 국내소재·부품기업(2,183여개) 연결



1. “공급망 분산전략”을 통한 GVC 재편 대응

▶ 특정국가에 과도하게 의존한 공급망 분산

1 거점 방식→‘+1 전략’으로 안전성과 회복력을 갖춘 GVC 구축 필요 (사례 : 와이어링 하니스)

2 해외 수입선 다변화 필요 (사례 : 일본 수출규제 사태)

▶ 日 수출규제 대응 성공사례 [출처: 연합뉴스 등 기사 발췌(6.25일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 (액체 불화수소) 일부 국산 및 중국산으로 대체
- (기체 불화수소) 일부 美 메티슨 기업제품으로 대체

[솔브레인, 램테크놀로지]

- 액체불화수소 공장 완공 및 증설 →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공급

[SK머티리얼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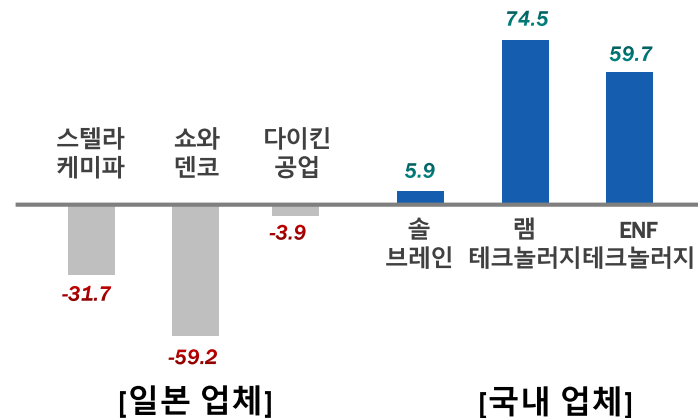
- 포토레지스트 생산시설 준공 예정(2021)

[듀폰]

- 美기업 ‘듀폰’으로부터 포토레지스트 생산시설 투자 유치

<韓·日 불화수소 업체 영업이익 변화>

- '19.4~'20.3 실적, 전년동월대비(%) -



2. 전략적인 해외투자 진출 지원 확대

▶ 기술 확보형 M&A 및 현지 파트너 발굴의 체계적인 지원시스템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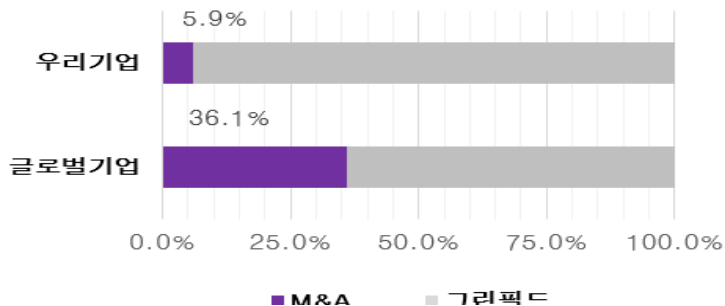
M&A 등을 통한 선진기법 활용 지원

[기술 확보형 M&A 추진]

포스트 코로나 대비 유망 산업 M&A 확대 → 신규 공급망
입지 확보와 부족한 기술의 국산화로 국내 공급망 안정화

- (방식) Tech 전문투자기관과 협력으로 상대적으로 투자자본과
리스크가 적은 ❶ 지분참여형 M&A(공동 R&D 참여 및 선진
기술 독점권 확보), ❷ 주요 선진국 우수기술 보유 한계
기업 적극 인수

<GVC 재편 투자 방식 비교>



[출처 : KOTRA 해외투자 한국기업 GVC 실태조사(2020.7)>]

현지 파트너 발굴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

[GVC 재편 대응 밀착 지원]

해외지원 거점을 확대하고 GVC 재편 지원 기능 신설

- (방식) 각 거점별 GVC 재편 관련 애로사항과 정보 공유를 통해
우리기업의 수요를 발굴하고 기업별로 맞춤형 지원을 시행

애로사항

- 기업들은 GVC 재편 동향/현지 정보 획득의 어려움이 있다고 조사
- 현지 적합한 파트너 발굴의 어려움

대응방안

- 지원조직 확대/신설 및 전담인력 확보를 통한 애로사항 해결
- GVC 재편 대응 기능 추가 및 지원조직 간 협업 강화

- (예) 가칭 「M&A 지원 센터」 신설 및 GVC 재편 대응 업무 수행
→ 향후 GVC 지원센터(가칭)와 통합해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

3. 포용적 상생협력 전략 강화

▶ 양국 간 상호 “Win-Win” 할 수 있는 포용적인 협력전략

- ▶ 상품수출 중심에서 벗어나 서비스, 투자, 인력이동, 전자상거래, 한류, ODA 등 **포괄적인 상생협력 진출전략** 수립
- ▶ 4차산업혁명에 따른 융복합시대에 단순한 국경개념을 벗어나 글로벌 가치사슬 관점에서 양국간 Win-Win정책 추진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창출

융복합 패키지 상품 개발

단순상품수출

포괄적 수출형

스마트시티, 에코시티 프로젝트 등
GVC상 고부가가치 프로젝트 공략

국경개념을 벗어나 세계로

자국생산이 아닌 양국 상생협력으로

Made in Korea

Make with Kore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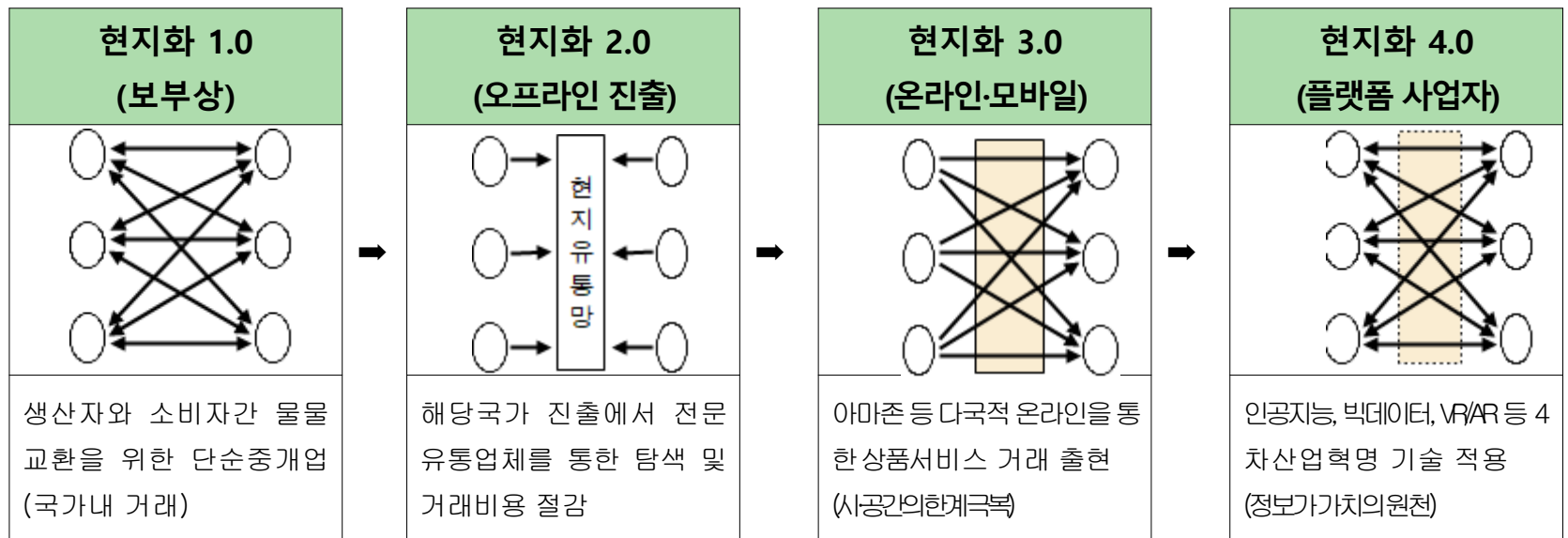
서비스, 투자, 인력이동, 한류,
시장기술 창출 능력, ODA 등

4. 4차 산업혁명과 현지화 전략

▶ 제조업의 경쟁력은 제조업과 결부된 서비스의 경쟁력에 의해 결정

(제조업 서비스화) 기업들의 제조업 서비스화 추세 가속화

- GVC가 효율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재화, 기술, 정보, 노하우 등이 효율적으로 이전되도록 물류, 유통, 판매 등 서비스산업 경쟁력이 매우 중요



자료: 산업부 보도자료('17.2)를 기초로 재구성

감사합니다

kotra